

특별기고



유덕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

쌀값·수급안정 두마리 토끼잡을 '유기농업'

허용 등 양곡 수급관리 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양정개혁을 추진했다. 2004년엔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쌀 농가가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설정해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를 도입했다. 2020년에는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 형평성 제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 강화를 골자로 소농직불금과 면직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는 밥을 주식으로 수천년을 이어져 내려왔다. 아침, 점심, 저녁 세끼에 농번기에는 아침결두리(새참)에 저녁결두리까지 다섯 끼니까지 먹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빵, 고기, 과일, 인스턴트식품, 건강보조식품 등과 같은 다양한 먹을거리가 쌀을 대신, 쌀밥이 주식의 개념에서 멀어져가는 듯해 농업직에 종사하는 공직자로서 서글픈 마음마저 든다.

최근에는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이나 콩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농정 1호 정책으로 도입했다.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을 통해 논에 콩, 가루쌀, 하계 조식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1ha당 100만원에서 430만원을 지원해 벼 재배면적 1만6,000ha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 더 작물 재배 의무 부여를 통해 200ha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백악이 무효, 위기의 농업

우리나라는 최근 70년간 농경사회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뤘다. 가파른 성장의 이면엔 수입필로 만든 빵 등 인스턴트 식품 소비량이 늘었고, 자연스레 밥과 쌀의 입지는 좁아져만 가고 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을 보면 1990년 119.6kg이었으나 2000년 93.9kg, 2022년엔 56.7kg으로 1990년에 비해 47.4% (62.9kg)가 감소했다. 쌀값 역시 지난 3월 기준 20kg은 4만4,797원, 80kg짜리는 17만8,340원으로 전년 대비 7.6%, 수확기 대비 1.4% 하락했다.

정부가 이 같은 다양한 정책에도 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시장 유통구조 분석 및 소비 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벼 재배면적이 연평균 1.1% 감소한 반면 식량 소비량은 연평균 1.9%씩 줄어 과잉 공급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만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전남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육성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육성 등을 위해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2005~2009)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는 '유기농을 선도하는 생명의 땅 으뜸전남 실현'을 슬로건으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020~2024) 계획을 추진 중이다.

친환경농업의 집중 육성 결과, 2005년 인증 면적 2,906ha로 전국(1만9,897ha)의 14.6%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지난 2022년에는 3만6,106ha로 전국(6만9815ha)의 52%까지 상승했다. 유기농 인증 역시 전국(3만9,467ha)의 63%를 점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중 유기농 쌀은 전국(2만4,550ha)의 74.6%를 점유하는 등 전남 논 면적(16만7,299ha)의 10.9%에 달한다.

국내 유기농 선도 전남 주목

쌀은 여전히 우리의 주식이자 근간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제는 생산량 증대를 지향하는 관행농업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을 추구해야 한다. 더 나아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고품질 저탄소·저비용·고소득 등 유기농업이 주된 쌀 수급 및 쌀값 안정대책으로 추진돼야 한다. 전남도는 지금 유기농 쌀 수출을 목표로 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업을 선도하는 전남을 만드는데 다시한번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업을 이끄는 전남을 주목해주길 당부드린다.

기고



이명경
여수시의원

여순사건 발발지에 역사관 건립 필요하다

장 인근인 사건 발발지에 가설 건축물을 짓는 것은 맞지 않고, 대체 부지를 찾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순사건 역사관은 먹고, 마시며 즐길 거리가 가득한 소풍센터가 짓는 일이 아니다. 아픈 역사의 현장 보존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현장에서 오감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느끼고 확인하며 진실을 만나기 위한 장소이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같은 달 ㈜한화 여수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인근에 건물 신축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장장 등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여수시장은 여수지역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

면담 자리에서 한화 여수 공장장은 '회사 입장에서 역사관 건립 가능 여부를 답하는 것이 맞지 않으나 건물 신축 여부는 여수시 의지에 달렸다'고 언급하며, '사업장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국가 보안시설로 잦은 노출 우려는 있으나, 위험시설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사업장 여건이 변화됐고, 이미 환경미화원 복지관등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등 건축물들이 이미 건립돼 추가 건축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때문에 여순사건 역사관 설치의 우리 세대의 무감각과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한화 공장장 면담 후 특위 위원들은 위원회 제6차 간담회를 통해 여수시 총무과장에게 특위 활동 결과를 시장에게 전달할 것을 주문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과 면담 일정을 조율했으나 여수시장은 아직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또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은 국가폭력의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70여년 동안 억압 받아왔고, 서로 섞이지 못하도록 연좌제라는 제도적 폭력도 당했다.

최근 추경예산은 2,200억원이 증액됐으나, 간절히 바랐던 여순사건 역사관 건립 예산은 없었다.

불행히도 부당한 사회적, 정치적 구속의 틀은 여수 지역사회에서도 만연해 그동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살아 왔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들을 지역사회로부터

역사관 건립을 약속한 지 3개월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특위 위원들이 역사관 건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만큼 여수시장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과거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해야 하며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에서 제외된 유족들의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 지역의 화합을 이뤄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

특지광장

농번기철에 각종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촌로들의 각별한 안전의식이 요구되는 때이다.

농기계 교통사고 안전의식 절실

또한 경운기 후면에 야광 반사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 시인성을 확보하는 한편 방향지시등을

을 재정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김덕형 무안경찰서 일로파출소 경감

농기계는 차량과 달리 구조 특성상 특히 야간에 차량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충돌 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야간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상책이다. 운전자 또한 농기계 운전자에 배려와 양보운전을 생활화하는 한편 한적하고 어두운 농촌길을 주행할 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경운기를 조심해야 한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露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뉴미디어본부 (062) 720-100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위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차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신양파크, 구도심 활성화 개발 어떤가

수백억원의 혈세로 매입한 옛 신양파크 호텔에 대한 공유화 사업이 제자리걸음이라고 한다.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생태시 민호텔과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공익적 가치와 이익을 주려 했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답답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당하는 광주시 업무부서 선정이 늦어지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시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아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계획대로 이곳이 생태 및 환경 친화공간으로 조성된다고 한다면 시민에게 또 하나의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겠지만 이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시민호수공원 등 비슷한 시설이 위치해 있어 어느 정도의 호응을 얻어낼지 미지수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광주시는 지난 2020년 10월 신양파크호텔이 폐업한 자리에 호화 주택단지 건립이 추진되자 난개발 방지를 위해 369억원을 투입해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했다. 이후 민관정위원회를 구성해 활용 방안을 모색, 호텔 건물을 존속시켜 생태시민호텔 건립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하나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에 민관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호텔 부지에 환경·체험·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최종 합의했지만 이 또한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개발은 어떤가. 애초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시작 단계에서 '광주타워' 건설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 사실이다. 생태시민호텔이 적절치 않고 재정 여력이 없으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 시내 전체 '뷰'를 아우를 수 있는 관광시설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현 단계에서 무등산 케이블카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만큼 이를 대체할 관광시설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더욱이 공동화한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호텔 부지 공유화 사업과 관련해 이를 담

화순, 다문화가족 전담팀 기대 크다

화순군이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 자국민 전담팀을 신설해 국내 정착을 돕는 새로운 형태의 행정서비스를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화순군의 기민한 대응은 이혼요구·가정 폭력·아동 학대 등 사회문제가 날로 증가하며 소외된 채 방치된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정보 68건, 국적취득 12건, 결혼정보 6건, 체류연장 7건 교육 2건 기타 38건 등 전 화순군 191건과 생활실태 파악, 병원 이용 등 통역서비스를 제공한 방문상담 25건의 직무를 수행했다. 군은 공무원 직위 1명을 추가 배치하고, 중국국적 출신 팀원 1명을 채용하는 등 조직보강을 단행, 더욱 힘을 보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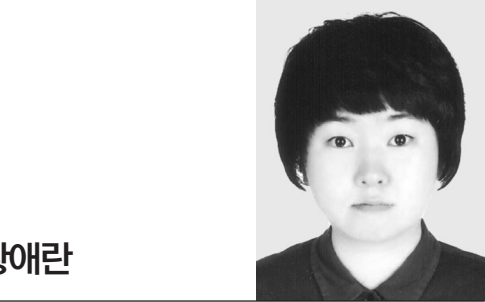
화순군은 다문화팀 신설과 함께 외국 국적 출신 결혼이민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긍심 고취, 애로사항 파악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다문화팀 신설에는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추가 수요를 예측한 구북구 화순군수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 성과를 기대케 한다.

다문화팀은 팀장 1명에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일본 등 4개국 국적 출신자 4명으로 이뤄졌다. 다문화팀은 팀 신설 3개월 만에 위기가정 5건을 발굴해 긴급지원과 연계했다. 다문화팀은 통역 26건, 일자리 34건,

다문화팀은 팀장 1명에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일본 등 4개국 국적 출신자 4명으로 이뤄졌다. 다문화팀은 팀 신설 3개월 만에 위기가정 5건을 발굴해 긴급지원과 연계했다. 다문화팀은 통역 26건, 일자리 34건,

5·18교육, 미래세대와 소통 고민해야

기지사첩



황애란

사회부 부장대우

을 광주로 초청해 1박2일동안 현장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교원 직무연수는 2018년부터 매년 125개팀 500명을 초청해 5월부터 11월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특강, 수업사례 공유, 사적지 탐방, 문화예술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5·18 전국화에 나선 이유는 단연하다. 미래세대에게 5·18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그 가치와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체감해서다. 역사적 가치와 이념이 뛰어날더라도 지역의 틀에 갇히면 그의 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2021년 시교육청과 5·18기념재단이 기획·제작한 5·18민주화운동인정교과서는 의미가 크다. 인정교과서는 미래세대에게 5·18의 정신과 가치를 알려주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공신력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결과물로 만들어졌다. 전국적으로 3만200여부가 배포됐고, 인정교과서를 본 교원과 학생은 3~4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선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답변이다. 1980년 이후 출생한 5·18을 겪지 않은 세대로 학생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을 가르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알리고 그 가치와 정신을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5·18교육은 이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할 시기가. 5·18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면서 인정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 활용한 눈높이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이 갖는 무게는 수치를 나타낼 수 없다. 5·18이 갖는 다양한 의미 중에서 우리 삶과 역사적 사실이 일치 하는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 5·18이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43주기를 앞두고 추모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국에서 저마다 사연과 미안함 등을 갖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학교에 오월강사단을 파견해 수업을 지원하고, 전국의 학생들